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25. 권영애 의원 외 11명 발의 (의안번호 519호)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0.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표창의 취소(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2025. 9. 30. ~ 2025. 10. 4.(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 포상제외자 :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 마련
- 포상 취소 및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개정 조항	주요 내용	상세 검토	비고
제2조 (표창대상)	표창 대상을 구민, 학생, 외국인, 단체 및 기관, 의회 및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화.		공무원을 표창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2조제1항제5호(공무원)에게 표창 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	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	
제15조 (표창의 취	①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수여한 표창을 취	현행 조례에 없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소) (신설)	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취소 사유에 성범죄 ·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명시하였음	
	②표창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되, 상장·감사장의 취소에 대한 심사 생략은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③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상 등의 환수를 의무화하여 포상 취소 및 환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함.

다.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특히,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및 부상 등의 환수 규정(제15조)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화(‘취소하여야 한다’, ‘환수하여야 한다’)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 개선 효과로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이 명예롭고 가치 있게 유지될 수 있음. 또한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를 재량이 아닌 의무(취소/환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소극 행정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25. 소형준 의원 외 5명 발의 (의안번호 520호)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0.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을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 함(안 제7조제2항)

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7조제3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5. 9. 30. ~ 2025. 10. 4.(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조문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 사유
제 7 조 제 2 항	(출석정지 징계 시 지급 제한 규정 존재)	(본문)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 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 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 (각호 및 단서)의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 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총 3호 신설: 회의 질서 문란 행위, 의장/위원장 석 점거, 출입 방해 등)	회의 방해 및 질서문 란에 대한 징계시 강 화된 지급 제한 근거 마련
제 7 조 제 3 항 (신설)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공개회의에 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 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 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 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국민권익위 권고 반 영. 경징계(경고/사 과)에 대해서도 의정 비 50% 감액 및 환 수 근거 신설.
제 7 조 제 4 항 (개정)	(종전 제3항)	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 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된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시 소 급 지급 근거를 마련 하여 개정 조항의 정 합성 확보.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으며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제도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 현행 징계 유형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나 '사과'를 받은 의원에게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 불이익(50% 감액 및 환수)을 부과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징계로 인한 의정 활동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는 예산 낭비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의 목적 적합성을 높임
- 징계 의결 이후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항([제7조제3항] 감액분을 환수한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엄정성을 기할 수 있음

나. 종합 결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적 타당성, 적법성 및 필요성이 매우 높음.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성북구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붙임 1.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내용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2022년 권고사항의 내용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여 제도 개선안을 권고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함.
- 실태조사 결과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 이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함.
- 권고 내용에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전반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3개월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시 2개월간 절반 감액 등이 포함됨.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59호

의 안 명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의회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지방의회)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다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외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다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외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다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요약 (2022. 12. 22.(목) 11:00) 〉

□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익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25. 이호건 의원 외 17명 발의 (의안번호 521호)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0.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호건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안 제6조)

다).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5. 9. 30. ~ 2025. 10. 4.(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개정항목	주요개정내용	현행규정과의 차이점
안 제2조	회의록을 책자회의록 (보존, 비공개)과 전자회의록 (전자임시, 전자)으로 구분하고 각 용어를 정의함.	'배부회의록'을 삭제하고 이미 운영 중인 '전자회의록'에 대한 규정 및 용어 정의를 신설함.
안 제6조	전자회의록을 각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공개 기한을 명시함.	공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권익위 권고 핵심 사항)
안 제6조	회의록 원고 완료 즉시 전자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임시회의록의 공개 방식을 '전자적 게재'로 구체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함.
안 제4조, 제5조	보존 및 비공개 회의록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함.	비공개 정보의 유출 방지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함.
안 제9조	자구 정정 기준에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발언 내용의 정밀도를 높임.	기존 정정 범위를 확대함.

나. 총평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준을 훈령에 명시하고 공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의회 투명성과 구민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안임.

다. 주요 검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인 공개 기한을 명확하기 위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핵심 조치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방식과 정의를 훈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9조에서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정정 범위에 추가한 것은 발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다만, '유사한 어휘'는 발언의 정치적 취지나 강도를 변경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한 동의어 또는 관용적 표현으로 치환하여 발언의 논리적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요구됨.

라. 결론

상기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